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힘내라 대한민국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6.26(금)	담당부서	원전환경과
담당과장	손호영 과장(044-203-5340)	담 당 자	류재형 사무관(044-203-5318)

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추진

-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장 호선 예정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(이하, '위원회) 정정화 위원장의 **사퇴의사 표명 및 기자회견문**에 대해,

○ 그간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'불공정' 및 '반쪽 공론화'라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 **유감을 표명함**

□ 정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*된 **재검토준비단**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·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며,

* 재검토준비단(총14명): 원전지역(5), 환경단체(3), 원자력계(3), 갈등관리전문가(3)

○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첫 날부터 회의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정부와 달리*, **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**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**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**하여 **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**하였음

* 환경단체 추천 위원 2명이 회의 직전 참여의사를 철회

○ 또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과학적·합리적 **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식**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

□ 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**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**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**의견수렴 절차를 진행**하여 왔으며,

○ 모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**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설득·독려**하였음

○ **합의된 원칙과 절차**에 따라 진행되는 위원회 의견수렴에 대해 '불공정' 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함

□ 정부는 앞으로도 **위원회 의견수렴 과정**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**공정하고 객관적**으로 **차질없이 진행**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,

○ 보다 **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**이 마련될 수 있도록, 의견수렴 과정에 **시민사회계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**를 당부드림

< 참고 >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

1. 재공론화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함**(위원회의 재구성)**

○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던 **재검토준비단**에서는 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 **정부에 위임**을 한 바 있으며, 정부는 **절차의 공정한 관리**를 위해 **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**하여 **중립인사로 구성**하였음

○ **그간 위원회가 결정한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절차가 이미 진행**되고 있는 만큼 **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**할 것임

2. 재공론화는 원전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, **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**가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 가능

○ **방사성폐기물관리법**상 산업부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,

- **위원회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사항**으로 규정하고 있음

3. 합리적이고 안전한 대안 모색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**탈핵시민사회계는 재공론화에 임해야 함**

○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**재검토위원회 논의체계는 항상 열려있는 바**, 중장기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**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** 참여하길 희망함

○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**탈핵 시민사회계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임**

* 탈핵시민사회단체에 토론회 참여를 지속 요청하였으나, 참여 자체를 그간 거부

4.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**지역실행기구는 재구성**되어야 함

○ **맥스터**에 대해 **원전소재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**되어야 한다는 **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하에,** 위원회는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할 **지역실행기구를 기초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의결**한 바 있음

○ **그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경주시가 '19.11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**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,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류재형 사무관(☎ 044-203-53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